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다현(희망제작소)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자본과 공공성을 토대로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관저공동체연합’을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인터뷰와 마을신문 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민 간에 형성된 사회자본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민은 스스로를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 세우면서 체계의 논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또한 풀뿌리 차원의 토론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생활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풀뿌리공론장, 공론장, 공동체, 생활세계 식민화, 사회자본, 공공성, 시민권력, 생활정치, 풀뿌리민주주의

1. 서론

우리사회에서 ‘공동체’는 더 이상 과거의 향수가 담긴 단어가 아니다. 1960년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상호부조의 전통적 공동체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요약,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거의 해체되었으나, 지역 곳곳에서 다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마을공동체와 그들의 실천은 우리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 또한 발을 맞추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동체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총 144개의 지방정부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지원사업은 사라져가던 이웃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주민을 동원하고 그들의 대안적 실천을 수동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와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하며 공동체로 전가하거나, 유형화 된 사업 추진방법, 추진실적 제시, 사업비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은 자유로운 대안 실천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지원사업이 순수하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과거 독재시대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비판도 수긍할 만하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수용하면서도 주체적으로 대안을 실천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부의 도구적 목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해석하기엔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이론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가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나아가 체계로 생활세계의 논리를 확장해나가는 과정과 그 원동력을 풀뿌리 차원의 공론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관저지역 마을공동체를 대

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차원의 풀뿌리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해본다. 둘째, 정부의 공동체 지원사업을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포섭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주민들의 태도를 확인한다. 셋째, 주민들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과,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우리사회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개인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경기침체의 해결책을 시장의 논리로부터 구한 신자유주의체제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합법적으로 강화된 자본의 힘과 효율성의 논리가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일상생활이 물화(物化)되어가는 과정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버마스(2006a)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합리성을 목적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합리성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를 대응시키고 있다. 문제는 의사소통적 구조를 갖는 생활세계가 형식적으로 조직된 체계에 의해 침범되는 사회의 병리현상인데, 이는 체계의 기능혼란으로 발생한 위기의 책임을 생활세계로 전가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개념화한다.

하버마스는 고도로 발전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공론장의 저항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며,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을 그와 같은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¹⁾ 이는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의제와 대응되는데, 이들은 환경, 소비자, 먹을거리, 안전 등 생활세계를 지향하는 초계급적 의제를 다루면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그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이러한 운동은 국가, 시장에 대한 저항과 압력을 행사하며 생활세계를 방어하는 한 주축이 되었다.

이에 정치체계는 이들과 투쟁하기보다 '유인'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임승빈 2002), 그 방법 중 하나는 사회운동의 제도화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고 그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제도적 통로의 확장을 의미한다(조희연 2010, 60). 특히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단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하였다. 운동의 입장에서 사회운동의 제도화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시민사회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의 자원동원과 네트워크 능력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시민사회의 인물이나 의제를 흡수함으로써 지배체제모니의 강화 기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운동의 저항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에 의한 포섭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조희연 2010, 78-79).

이와 같은 포섭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1) 신사회운동이 다루는 저항의 의제는 실용적, 다원적 이념을 지향하며 삶의 질, 평등권, 개인의 자기실현, 참여, 인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급 기반 노동운동과 구별된다.

틈새를 보완하는 효과적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 연령별, 성별, 거주지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체계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세계를 체계의 논리에 종속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는 활동을 위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비영리조직이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통제에 취약해질 뿐 아니라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정부의 필요와 요구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동체 지원사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Lipsky-Smith 1989; Ferris-Graddy 1989). 실제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주민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광역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여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커뮤니티비즈니스 생성을 통해 마을 내 순환경제를 만드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사업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6, 6-7).³⁾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적 실천은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기획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한 통치’의 작동으로 볼 수 있다(Rose 1996; 박주형 2013). 따라서 정부가 주민들을 역량있는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2) 실제로 대전광역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공동체에 도움이 된 항목에 대하여 50.8%가 ‘재정적 도움’으로 응답하였다(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3) 또한 공동체 지원사업은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 언론홍보 등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해야 하며, 사업비 사용은 증빙이 가능한 소모성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나 운영비 사용은 제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조건은 주민들의 다양한 실험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 치밀한 통치의 전략에 동원하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2)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방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현재, 공론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의하고 있는 참여적, 직접적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하버마스(2001)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중이 ‘공개성’의 원칙을 가진 공적논의를 통해 공권력에 대해 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라는 거시적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그 의제를 공적사안으로 한정시키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토론에서 제외하고 있다(Fraser 1990, 58-59). 그러나 복잡성이 가중되고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가시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앙중심의 거대 정치담론은 그 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배제할 뿐 아니라 생활세계 문제 해결에도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장 개념이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영역인 ‘풀뿌리(grassroots)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승우(2006)가 제시한 ‘풀뿌리공론장’의 개념이 유의미한 이론적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는 풀뿌리민주주의와 공론장의 개념을 접목한 풀뿌리공론장이 대중의 정치적 활력을 기르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적 원리를 제시한다고 본다. 그는 풀뿌리민주주의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하는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자율성과 공적인 자율성의 변증법 추구, 권리의 상호주관적 구조와 자기입법의 의사소통적 구조를 확립하는 공론장을 토대로 삼

4) ‘풀뿌리’는 소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승우(2006, 104-105)는 풀뿌리가 민초(民草)의 의미로 ‘특별히 권력을 지닌 자와 반대되는 일반 대중’ 또는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일반시민의 주체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음으로써 그 의미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하승우 2006, 3). 즉, 풀뿌리공론장은 사적영역의 문제를 공적으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합의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공공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풀뿌리공론장의 의제가 사적 영역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은 그것이 반드시 한정된 지리적 영역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제거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쉽고 자유로운 토론을 실현시킴으로써 공론장이 지구적 범위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런 점에서 풀뿌리공론장의 개념에 '지역성'이 배제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공론장 이론을 실제 사례와 연결한 선행연구는 그 범위를 특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루고 있다(주선미·한인숙 2002; 주선미 2010; 한선 2012). 이는 공동의 생활권이 동질적인 생활경험과 비슷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의 정치'(골드파브 2011)가 형성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은 토론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시민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범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⁵⁾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사소통으로 생활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례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박주원(2007)은 1970-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다른 성격을 갖는 대안공동체운동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해나가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유성희(2008)는 시민단체가 지역공동체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권효림(2015)은 마을공동체가 하나의 의제에 대해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1/N카드'의 의사소

⁵⁾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풀뿌리공론장을 한정된 지역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생활의제가 도출되는 구체적인 공간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며, '풀뿌리'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시민의 참여와 주체성,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등이 여전히 풀뿌리공론장의 핵심적 요소임을 견지하고 있다.

통체계를 통해 합의적, 민주적 의사소통을 연습함과 동시에 외부와도 연대할 수 있는 공론장 확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는 주민의 주체성과 지역 내 의사소통이 생활세계로부터 대안을 도출해내고 정치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운동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서 구체화되어가는 정치적 동력을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거나, 지역 내 의사소통 활성화에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여 주민 스스로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측면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를 ‘생활의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안적 해결방안을 합의해나가는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며,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체계의 식민화에 저항하는 생활세계의 동력을 드러내고자 한다.

생활세계에서 활성화되는 의사소통은 구성원간의 사회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체계의 논리에 대항하는 공적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의 비물질적 자원을 포착하려는 개념으로 그것이 ‘사회적(social)’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자본(capital)’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생산성을 함축한다(정선기 2012, 28).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콜만(Coleman 1988)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제도화 된 관계의 연결망이나 관계에 연결된 실질적, 잠재적 자원으로 사회자본을 파악하며, 관계를 통해 그것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반면 제도주의적,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Putnam 1993, 35-36). 퍼트남의 사회자본 개념은 공동체의 ‘시민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사회자본을 공적 영역에 적용하여 그것의 비영리적, 공공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

복하고 공공선의 구현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Portes 1998, 18; 퍼트넘 2009). 이상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배태되어 있는 자산’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의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사회적 신뢰, 규범, 협동, 민주주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선기 2012, 32-33).

또한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구성해낼 수 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공적질서로서의 공공성은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의 체계이다(조대엽 2012; 홍성태 2012; 조대엽·홍성태 2013). 공공성의 사회구성적 힘은 어떠한 정치적 상호작용의 구조적 맥락에서, 얼마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론으로서의 정치적 이슈를, 어떠한 행위양식을 통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모아내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공공성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홍성태 2012, 169). 이런 점에서 풀뿌리 차원의 공론장은 일상의 문제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에 통용되던 공공성을 해체하고 생활세계의 언어로 공공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가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생활세계가 체계의 식민화에 저항하고 그 논리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사례연구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표-1>과 같이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서 활동하는 6개 공동체와 그들이 연합한 ‘관저공동체연합’이다.⁶⁾ 대전시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관저동 6개의 공동체

로 한정한 이유는 이들이 2014년부터 연합체를 형성하여 의제의 범위를 마을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풀뿌리공론장의 형성과 활성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관저공동체연합에는 마을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신문이 공론장의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신문기사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대상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표-1〉 관저동 공동체의 형성시기 및 주요 활동 영역

공동체 명	형성 시기	형성계기 ^{가)}	활동 영역(과거 활동 포함)
관저품앗이공동체	2004년	자발적	- 공동육아, 소모임, 공유공간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한살림 관저마을모임	2006년	자발적	- 안전한 먹을거리, 생활환경
해뜰마을 어린이도서관	2007년	자발적	- 어린이도서관 운영 - 어린이교육, 에너지·환경 교육
관저마을신문사	2011년	제도적 지원	- 마을신문 발행 - 지역 사회서비스 발굴 및 네트워크
청소년 교육공동체 품앗이	2013년	자발적	-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실행 -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서구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2013년	제도적 지원	- 청소년 음악 교육, 문화 활동 지원
관저공동체연합 (연합체)	2014년	자발적	- 마을주민 소통 활성화 - 대전지역 공동체 연대활동 참여

6) 2017년 4월부터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조직화사업팀’이 관저공동체연합에 합류하여 현재 총 7개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 당시에는 연합활동의 기간이 길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6개의 공동체를 ‘관저동 공동체’라 칭하고자 한다.

7) 공동체의 형성계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행정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직된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으로 표기하였다.

조사는 관저공동체연합에 소속된 각 공동체의 대표 자격 주민 7명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중에는 2개 이상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활동을 여러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월이며, 사전인터뷰를 제외하고 모두 1:1로 진행하였다.

‘관저마을신문’의 신문기사 또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관저마을신문은 월간신문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1호가 발행되었다. 주민이 직접 취재, 기사작성, 편집까지 담당하는 이 신문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공적 의제로 인식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또한 관저동 공동체의 활동이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층인터뷰 자료와 상호보완 할 수 있었다. 분석한 신문자료는 2011년 11월 창간호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행된 총 50호로, 기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공동체 활동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다.⁹⁾ 단순 광고를 제외하면 각 호는 평균 24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1,038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는 그것이 다루는 주제와 목적, 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이웃’, ‘문화’, ‘교육’, ‘지역개발’, ‘지역역사·지역문화’, ‘안전’, ‘환경’, ‘생활정보’, ‘복지’, ‘정치·자치’, ‘기타’ 등 11개 범주로 코딩하였다.

⁸⁾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은 참여자 간에 순환하여 담당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는 2017년 역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⁹⁾ 관저마을신문은 월 1회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일부 발행되지 않은 달이 있었다. 그러나 신문의 호수는 순서대로 발행되었기에 분석한 총 신문자료 수는 50호이다. 또한 2011년 11월, 12월 기사는 그 구성과 성격이 2012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연도의 기사는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4. 관저동 공동체의 형성 배경

관저동 공동체가 활동하는 대전시 서구 관저지역은 대전시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신흥 주거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중소형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과 더불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40대 부부 중심의 가구가 이주한 특성을 보인다. 현재는 대전에서 세 번째로 1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관저동 공동체의 핵심 참여자 역시 어린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공동체의 주요 활동이 교육, 안전, 건강한 먹을거리 등 자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의 인구 구성이 공동체 활동을 촉진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활성화에는 지방정부의 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전광역시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확충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동체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 기준 총 9개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 한 해 동안 총 77개의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총 사업비는 1억 9천여만 원으로 대전시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대전광역시 2017). 관저동이 속한 대전시 서구 또한 2013년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확충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기준 총 4개의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자체 중 하나이다. 이는 관저동 공동체가 활동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에서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5.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1) 풀뿌리공론장의 형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형성된 관저동 공동체들은 참여자의 헌신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이 일정 이상 확대되지 않았고 개별적 공동체 활동이 마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식하였다. 이에 2014년 3월, 비슷한 지향을 가진 관저동 공동체들은 연합을 형성하여 활동 범위를 마을 전체로 확장시켰다. 연합 형성 결정에는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저동에서 각자였을 때 공동체, 해뜰도 잘했었고, 신문도 나왔었고, 품앗이도 들어갔었고 하지만 따로따로 놀았었잖아요. 근데 같이 (연합을) 하면서 마을에서 뭔가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할 수,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거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도 훨씬 더 좋구요. 각자 잘하던 거고, 각자 좋은 일을 하던 거였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생긴 거고 관저동을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관저공동체연합이 하는 역할이 됐죠.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연합 형성 후, 관저공동체연합은 ‘마을’ 범위의 의제를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전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기획했는데, ‘우리 마을 이랬으면 좋겠네’ 간담회는 ‘관저동에 있어서 좋은 것, 없어서 아쉬운 것’이라는 주제로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대화로 구체화시켜가는 경험을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기사] '우리 마을 이랬으면 좋겠네' 관저공동체연합 간담회

(전략) 마을 주민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관저동에 있어서 좋은 것, 없어서 아쉬운 것>이었다. 이어진 집단토론에서는 '더 좋은 관저동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의견을 모으고 분류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마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중략)

- 관저동에 있어서 좋은 것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저문예회관, 드림오케스트라, 공동체, 마을신문, 대형병원, 관저 품앗이, 다양한 먹거리
- 없어서 아쉬운 것
-청소년 문화 공간(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복합센터, 혁신학교, 극장, 전철, 종합체육시설, 관저동 특성화(맞춤) 일자리, 내 집, 놀이공원, 활동하는 젊은이(2,30대)
- 그렇다면 더 좋은 관저동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
-개인의 노력: 다양한 참여, 정치적 관심, 의식변화
-관(행정)의 노력: 이용시설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믿음가는 학교, 주차-안전문제 해결
-공동의 노력: 민관의 소통, 활동가 모임 활성화, 마을 문화 활성화

- 관저마을신문 제 40호(2015년 12월) 1면

기존의 공동체 활동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대안적 활동이었지만, 그 성과는 공동체체에 참여하는 소수만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간담회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간의 연합은 기존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있던 활동을 '마을'이라는 범위로 확장시킴으로써 공적인 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그 의제는 주민의 일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생활의제를 다루고 있다. 즉, 공동체 간의 연합은 토론의 범위를 확장하고 풀뿌리차원의 의제를 공적인 영역과 연결하는 풀뿌리공론장의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저마을신문은 풀뿌리공론장의 의제를 확산하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관저동 전역에 월 1회, 약 1만부가 배포되는 관저마을신문은 기성언론이 다루지 않는 일상의 문제를 공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신문이 가진 '공개성'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는 인식은 공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다루려는 태도로 이어졌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이냐 방향이. 그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알려만 주고 판단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략) 신문에서 그럼 더 얘기를 하고 싶자, 아니면 다음에는 기고글로 가자라던가 제보로 가자라던가 우리 생각해봅시다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기자분들이랑. (중략) 우리 지금까지 색깔이 있다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아니고,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쓰는 신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이상에서 공동체 간의 연합은 마을의 영역으로 의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주민들의 사적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하는 풀뿌리공론장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적인 시각으로 지역의 사안과 주민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마을신문은 풀뿌리공론장의 매체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계의 포섭에 대한 생활세계의 저항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의 연계

공동체 활동은 참여자들의 주체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그 활동은 제약되기도 한다. 관저동 공동체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점차 정부의 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재정을 충당하고 활동을 확장해나갔다.¹⁰⁾ 주민들은 재정 지원에 수반되는 활동의

자율성 제약이나 주민 동원 등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활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을신문만 해도 사실은 마을기업 지원금 없었으면 시작 못했죠. 워낙 초기자본이, 돈이 드는 거여서. (중략) 지원금이 도움이 됐냐, 어떤 사람들은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빠르게 가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중략) 근데 하다가 말고, 처음에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하고 싶었던 거고, 하려고 했던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B, 관저품앗이공동체 대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관변단체의 성격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인식하기에 관변단체와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적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능동적 태도’였다. 이러한 인식은 행정체계가 지원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성을 인지함에도 스스로의 활동이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 어쨌든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항상 문제 속에 있어요. (중략) 여기(관변단체)는 그냥 내려주면 받는 사업을 하는 거고, 오히려 이분(공무원)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래요. 이게, 스스로 알아서 잘하거든요. 문제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자본확충 그런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이런 건데, 그 방향과 맞는 거예요.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정부가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마을에서 실현

10) 관저동 공동체와 관저공동체연합은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였다.

하고자 하는 분명한 지향점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주민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성 실현이라는 목적의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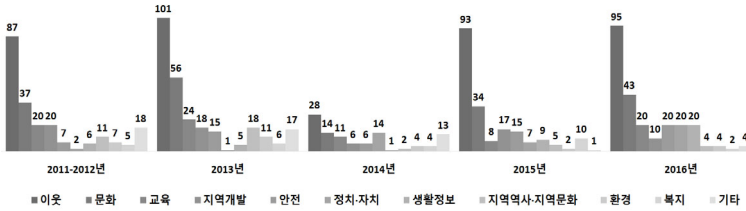
(2)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소수 주민의 희생적 참여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부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기 쉽다. 이는 참여자 간의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외부자에 대한 배타성을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¹¹⁾ 관저동 공동체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참여자 간의 강한 결속력이 형성되었으나, 내부의 결속력 유지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을 시도했다.

먼저 관저마을신문은 주민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주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룸으로써 주민 간에 얼굴을 익히고 일상적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려는 취지였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저마을신문이 다루는 주제 중 ‘이웃’과 관련된 기사는 매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¹¹⁾ 퍼트남(2009)은 결속형 사회자본이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함으로써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접근배제와 공동체의 문화적 관용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별 행위자에 대한 창조적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정선기 2012, 34-35).

〈그림-1〉 관저마을신문 기사 주제 분포



이들이 전체 지역주민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노력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살아갈 이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는 활동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녀회나 봉사단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포함되었다. 50대 이상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우리끼리 하나까 뭔가 빠져 있는, 마을 속에서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로는 아가들이 있구요, 30대, 40대 애기들을 둔 엄마들이 있어요. 거의 공동체가 그래요. 근데 50대, 60대는 자생단체인 거예요. 이분들이 빠져있는 건 반쪽짜리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이라는 게 다 어울려야 되는데 다 어우르지 않는다는 게 있었고, (중략) (자생단체,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힘들지만 가야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회가 오면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문에서는 시도한 게 그런 거였죠. 관계망 형성.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나아가 이들은 마을의 자영업자와도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자영업자와의 연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교류함’으로써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호의를 경험한

주민은 그 성과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주민 간의 호혜적 관계가 선순환, 재생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아이가 자기는 댄스동아리를 하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대요. (중략) 우리 아이들 다니던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관장님 만나서 애들이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장소 달라고 (중략) 애네들 여기 소개를 시켜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중략) 자기네가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댄스 협찬 무조건 하겠다, (중략) 그래서 얼마 전에 마치광장에서 춤 공연 했다고. 개네들이 개네들이예요. (중략) 애들이 나중에 커서 프랜차이즈 가게 아니라, 그렇게 철학이 있고 깊이가 있는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과 의... 그 분도 마을 주민인거잖아요. 그분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가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애들이 해주면 어떨까. (C, 청소년교육공동체 꿈앗이 대표)

주민 간의 소통과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호혜적 관계는 지역 내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연결된다.¹²⁾ 사회자본은 마을, 도시, 국가 등 공동체의 '시민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 적용하면 그것의 비영리적, 공공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Portes 1998, 18; 정선기 2012, 34). 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로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공통의 의식을 가지게 하고 사적 이해나 집단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체계의 논리로 해체되는 주민 간의 연대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3) 의사소통을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

¹²⁾ 실제로 '대전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의 60%가 사업을 통해 구성원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으며, 76%가 네트워크가 확장되었고, 68%가 확대된 네트워크와 협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실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개발사업은 생활세계로 체계의 논리가 침투하는 식민화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저동 또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대전의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관저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편이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2011년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그 형태를 고가(교량) 방식과 지상(노면) 방식을 제시했는데 대전시는 수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가 방식을, 일부 시민단체는 더 많은 노선 확충을 위해 노면 방식을 주장하는 등 건설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4월, 당시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일방적 확정발표를 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고조시켰다.¹³⁾ 대전시의 결정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에 대하여 주민들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 시점에서 국가의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하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빠른 착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결정이 미래세대가 살아갈 마을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공공성의 관점에서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장님이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시책이 내가 있을 때 뭔가를 이루어 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여지는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중략) 왜 두 가지만 있느냐, 지하도 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배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사업으로써 인거지, 정말 몇 백 년을

13) 도시철도 2호선은 당시 민선5기 대전시장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내에 그 방식을 확정하고자 한 것이다.

설계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하로 가는 게 더더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 있는 거예요.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이와 같은 태도는 관저동 구봉산 일대에 대규모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개발계획에서도 나타난다. 이 개발계획은 지역의 부동산 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았으나, 그린벨트 해제,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지역 중소기업의 상권 위협 등의 논란 속에 지방정부, 일부 시민단체, 주민 간에 많은 갈등을 유발한 사업계획이었다.

주민들에게 관저동은 잠시 살다 떠날 곳이 아닌 자녀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사업이 가져올 인한 경제적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갈 뿐, 일반 서민에게는 집값 상승 등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¹⁴⁾ 따라서 전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았다.

개발이 되면 일단 차량 유입들이 많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로서는 환경도 그렇고, 구봉산이 깎이는 것도 싫고, (중략) 이제 길이 넓어지고 외부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중략) 나 관저동에 살았었어~ 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래서 왜 이사 가셨어요~ 그러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비싸서 여기에 계속 못 있으시는 거예요. 전세 값이 계속 오르니까... (중략)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지. (B, 관저품앗이공동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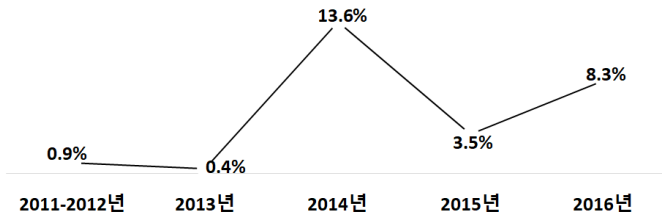
¹⁴⁾ 실제로 이 사업은 계획 발표만으로도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쇼핑몰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대전 서구 부동산값 들쭉”, 『아시아경제』, 작성일자 2010년 12월 3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309035725531>, 접속일자 2017년 6월 10일.

이상의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미래와 이웃을 고려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재구성해내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시장이나 국가의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사회적 토대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강수돌 2007, 105-106). 생활세계에서 지역의 사안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공공성은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로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3)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정치의 가능성

지역 일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곧 정치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관저마을신문의 ‘정치·자치’ 관련 기사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림-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미하던 ‘정치·자치’ 기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관저마을신문 기사 중 ‘정치·자치’ 기사 비율



기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것이 다루는 내용 또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정보, 공약, 투표 지식 등 단순 선거정보가 주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는 지역정치인의 활동 공유,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공동체의 요구사항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동장의 활동도 기사화하여 자칫 놓치기 쉬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관저마을신문의 역할은 지역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감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건데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대요. 그러면은 설계하기 전에, 우리 의견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설계 끝났으면 그거 우리한테 설명해주라. 그래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설명회하고, (중략) (라커룸을) 여자는 240개, 남자는 160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샤워부스는 똑같은 거예요. 개수가. (중략)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부터가 시작인거죠.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의 확산은 긍정적 상승효과가 있었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한 제도다. 주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마을을 직접 바꿔보고자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적 이익보다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관점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얘기 나는 거 중에 하나가 육교 있잖아요. OO중학교 올라가는 육교가 있는데 굉장히 낡아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길이 침울해요. 내 자식이 그 학교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은. 근테 내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여기가 꽃길이거나 음악이 나오면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하나 듣고 그냥 가 본 거예요. 옛날에는 내 아이만 관심 갖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보았는데, 이제 마을을 보는 거죠. 시선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주민 참여 아니냐, 그게 예산이라는 돈이 합쳐져서 변화된다면 이게 진짜 환상이지. (D, 관저공동체연합 대표)

이후 구성된 대전 전 지역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는 주민들의 참여 반경을 더욱 확장시켰다. 대전의 마을활동가들은 구(區) 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기획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2016년 지역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이었다. 구의원이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봄으로써 지역의 사안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선출한 지역 정치인이 수행하는 역할도 알게 된 기회였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그 얘기 하셨죠. 다음에 또 갈 거예요, 다 들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 거 같으면 구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엔 더 많이 가자,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중략) 저 구의원은 도대체 저렇게 되면서 뭘 할까(선출되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도 풀렸고, 한편으로는 저런 거를 하려면 활동가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다 들었었어요. (A, 관저마을신문사 발행인)

평소 정치는 일반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 일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제도권 정치로까지 관심이 확장되었다. 또한 지역사안을 다루는 정치인의 역할을 알게 되면서 주민들도 직접 도전해볼 법한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

영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주민들은 정치참여를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도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가 저의 생각이예요. 그럼 우리 중에서도 구의원 나올 수 있고, 우리 중에서도 시의원 나와서, (중략)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렴해서 그걸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책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다, 움직이다 보면 나중엔 정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목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게 미세해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었고, 키우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보니까 생겨났고,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D, 판저공동체연합 대표)

이상과 같이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으로 도출한 대안을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참여적 원리를 실현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참여효능감으로 더욱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으로 구체화되는 주민들의 주체성과 공공적 실천은 생활세계의 방어 뿐 아니라 체계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구체적 생활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생활정치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생활정치는 기존 정치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그동안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공공성을 시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이시재 1995, 25-26).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되었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한 발 더 도

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6. 결 론

지금까지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풀뿌리차원의 공론장이 어떻게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자극하고 체계의 포섭에 저항하는 기반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체계의 공동체 지원사업은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주민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안적 실천을 행정의 목적 아래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의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체계에 포섭되기보다 주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간의 연합을 통해 형성된 지역의 풀뿌리공론장은 의제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였고, 주민들은 생활의제를 공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담은 마을신문은 풀뿌리차원의 의제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체의 기능을 하였다. 풀뿌리공론장의 형성은 생활세계에서 정치적 활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주민 간에 활성화된 의사소통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형성하였다. 사회자본은 사적 이해관계와 집단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연대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미래세대와 이웃을 고려한 관점에서 공공성을 재구성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스스로를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 세웠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과 공공성은 체계의 논리에 저항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생활세계에서 도출한 대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구체적 생활이 정치가 되는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세계의 논리가 체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제한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관저동 주민들은 관저동을 장기적 거주지로 인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태도로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장소의 규정적 의미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집단에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이기도 하다. 또한 관저동은 정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때부터 활동한 주민들의 역량이 정부의 자원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주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체계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접수 2018. 4. 6. 심사완료 5. 9 게재확정 5. 10)

참고문헌

- 강수돌. 2007. “새로운 공동체 실험과 공공성의 새로운 상상력.” 『사회비평』 . 38. 103-118.
- 골드파브, 제프리, 이충훈 역. 2011. 『작은 것들의 정치』 . 후마니타스.
-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의의.” 『한국사회학』 . 49(5). 151-180.
- 대전광역시. 2016. 『우리, 마을, 소리: 공유 및 마을만들기 2016 성과집』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 _____. 2017. 『우리, 마을, 소리: 공유 및 마을만들기 2017 성과집』 .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과.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2015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성장사례조사 결과보고서』 . 대전광역시.
- 박주원. 2007.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원.” 『기억과 전망』 . 17. 175-202.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 23(1). 5-43.
- 유성희. 2008.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시민사회와 NGO』 . 6(1). 149-185.
- 이시재. 1995. “삶의 정치와 공공성.”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주민자치, 삶의 정치』 . 대화출판사.
- 임승빈. 2002.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 1(2). 109-144.
- 정선기. 2012.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의미.” 『사회과학연구』 . 21. 27-44.
- 조대엽. 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 13(1). 3-62.
- 조대엽·홍성태. 2013.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아연구』 .152. 7-41.
- 조희연. 2010.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조희연·김

- 동춘 김정훈 엮음.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아카데미. 25-137.
- 주선미. 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171-183.
- 주선미·한인숙. 2002. “공론장과 지방정치: 고양시 ‘리브호텔’ 건립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275-295.
- 퍼트남, 로버트 D, 정승현 역. 2009. 『나 홀로 불링: 불링 얼론,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 _____, 장춘익 역. 2006a. 『의사소통행위이론1: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
- 하승수. 2006.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도시와 빈곤』. 82. 103-122.
- 하승우. 2006. “풀뿌리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비판적 재구성 and 확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선. 2012. “블로그 이용자의 지역 공론장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6(4). 365-388.
- 홍성태. 2012. “공론장, 의사소통, 토의정치 -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과정의 동학.” 『한국사회』. 13(1). 159-195.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81-93.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Ferris, James. M. · Elizabeth Graddy. 1989. “Fading Distinctions among the Nonprofit, Government, and For-profit Sectors.”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Challenges, Changes, and Policy Consider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Fraser, Nancy.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Duke University. 25/26. 56-80.
- Lipsky, Michael, · Smith, Steven R. 1989.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4). 625-648.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Rose, Nikolas.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3). 327-356.

Abstract

Resistance and Expansion of Lifeworld through Grassroots
Public Sphere
-An Analysis in Gwanjeo-dong Local Community-

Lee Da-Hyeon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growing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defend the lifeworld with social capital and communicative publicness by grassroots public sphere based on Habermas' colonization thesis of lifeworld from the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singled out the "Gwanjeo Community Unite" in Gwanjeo-dong, Seo-gu, Daejeon-si as the case of local communiti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and local media analysis as research methods. In this result, the social capital formulated by communication expands social values as common good apart from economic logics and the residents created the publicness autonomously. Futhermore, the discussion of grassroots level made them interests in politics, it shows the feasibility of life politics.

Key words: Grassroots public sphere, public sphere, local community, colonization thesis, social capital, publicness, citizen power, life politics, grassroots democracy